

이재명 대표 '9월 영장실'에도 계파 싸움 바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LAB2030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전망 친명 "검찰 수사 정치 탄압"...비명 "구속 땀 비대위 체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하면서 당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친 이재명 진영은 이번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 이재명 진영 등은 영장청구와 구속 수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른바 정국회 개최 이후인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당 안팎으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까지 분출하게 되는 또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 셈이다.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 대표가 취할 입장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명확히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서 당과 의원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가결 요청은 불필요하며 원칙대로 자유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벌써 공개리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런 언급은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당 대표 중심 결속'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계파 갈등이 대폭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면 대표직 사퇴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옥중 공천'을 하려 들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명계이자 친이박연계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사퇴론'에 재차 불을 지핀 것도 전반적인 비명계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본격 외부 행보를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제2의 DJ(김대중)가 필요하다' 등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던 점에 친박(친이낙연)계 중심으로 비명계가 세 규합에 나설지 여부도 향후 민주당 진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면 거취 문제가 화약고같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대표에게 달린 문제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친명 "대의원제 개편" 혁신안 받아들여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친명' (친이재명) 성향의 의원인 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당이 대의원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이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는 "정당법은 정당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 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당헌·당규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인1표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혁신안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1인1표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1인1표를 행사하는데 왜 민주당에선 당대표·국회의원·대의원·권리당원 모두 1표라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비명(비이재명)계는 대의원 몫 배제 혁신안에 대해 친명계가 영구히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민주 언론자유특위 간담회... "과거 언론인 등 닳치는 대로 제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정책 의혹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닳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제는) 강압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높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진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이 재학했던) 하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눌러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정략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동관 아들, 학폭에도 대입 불이익 없었다"

서동용 "권력·편법 동원" 비판

하하고에서 학폭을 저지르고 일반고로 전학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이 입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최상위권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고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읍) 국회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은 하하고에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결국 전학을 갔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징계처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수시를 지원할 때 학폭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이 수시 지원한 고려대학교 OKU미래인재전형(특별), 고려대학교 일반전형(논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입학사정관), 성균관대학교 일반학부전형(논술) 4개 모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본으로 학생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전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 의원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과, 비교과활동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등 학내의 징계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권력과 편법을 동원해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것인데, 학기 중에 전학을 가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